시, 16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경제현안 점검회의 개최경제 전반 기관, 지역 상공계 모두 모인 건 올들어 처음부동산·건설, 자동차, 내수, 관광, 수출입 전반 대책 논의  
  
  
  
부산시는 16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김광회 경제부시장 주재로 ‘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 관광 등 분야별 간담회는 열려왔으나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유관 기관, 지역 상공계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부산시 제공글로벌 위기 고조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산시가 관련기관과 한자리에 모여 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부산시는 16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김광회 경제부시장 주재로 ‘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 관광 등 분야별 간담회는 열려왔으나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유관 기관, 지역 상공계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회의에는 부산연구원을 비롯해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코트라 부산지원단 등 유관기관들은 물론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지역 상공계도 참석했다. 이들 기관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회의는 건설, 자동차, 조선·해양, 관광, 수출입 등 주요 지역 경제 분야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 업계를 위한 자금유동성 개선 관련 금융지원, 지역 업체의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참여 비율 확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입 등이 논의됐다.하반기 르노코리아 신차 출시를 앞두고 미래차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과 전력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불황 등으로 주춤해진 자동차 분야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거론됐다. 인력 확충·중국 수요 대응 등 조선·해양 분야 지원도 회의의 주된 안건이 됐다.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만기 연장, 녹색기업 지원 특례보증 등과 함께 소비 촉진·물가안정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관광마이스업계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해외 방문객을 적극 유입하고, 수출입 분야 안정화를 위해 해외 물류비와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지원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김광회 경제부시장은 “지역 기업과 시민이 경제 활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지역 상공계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